

##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

곽건홍 저, 도서출판 선인, 2016

이상민\*

곽건홍교수의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는 제목 그대로 동아시아의 아카이브를 비교 연구한 저서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아카이브의 현재 제도와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이제까지는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여러 개의 논문을 모아서 봐야만 동아시아 아카이브의 역사와 제도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편리하게 동아시아 아카이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의 아카이브제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 주제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유용한 책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의 아카이브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하게 해줌으로서 학습 텍스트로서 장점이 있다. 독자들은 한·중·일 각국의 아카이브제도를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지만, 외국제도를 배우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의 현재 위치와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선하거나 발전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아카이브제도와 조목조목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은 전반부에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아카이브의 역사와 현대 아카이브 제도의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전근대 시기에서는 각국의 고대

---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신분질서 및 봉건사회의 유지라는 지배세력의 필요에 의한 아카이브의 생산과 보존이 실록 등 역사서 편찬과 집중보존 시설로서의 서고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서양의 아카이브 제도보다 앞서 발달한 동아시아 아카이브의 궤적을 정리한다. 저자는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 아카이브 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어 각국 아카이브 제도의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근대 서구 행정체계를 이식하면서 본질적으로 관료의 권력 독점과 비밀주의를 유지시키는 행정제도로서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시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부비밀주의를 조장하고 행정능률 중심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경향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공공기록관리의 핵심적 목표인 정부의 설명책임성의 보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으로 정점을 이룬 한국의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저자는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집권적 기록관리’ 일본은 ‘분권적 기록관리’로 장기적, 점진적으로 공공기록관리체제가 발전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중국의 공공기록관리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기록의 통제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한 전체주의 기록통제와 다를 바 없으며, 일본의 공공기록관리는 정치권력이 허용한 주변부 기록의 사후관리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한 마디로 동아시아의 공공기록관리는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추구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저자는 우회적으로 한·중·일 각국의 기록관리법과 아카이브 제도를 주제별로 비교하여 이런 특징을 한 눈에 파악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책이 단순한 동아시아 아카이브에 대한 학습 텍스트로서 머물지 않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저자가 가진 동아시아 아카이브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과 제안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아카이브가 설명책임성과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민주주

의 시대의 아카이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티카 활동 등 한·중·일 국가아카이브 중심의 국제협력활동에 머물지 말고, 민간 아키비스트들이 주도적으로 연대하고 기록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아시아의 아카이브가 능동적인 설명책임성과 굿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른바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포럼’의 조직은 저자가 제시한 한 단계적 방법론이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동아시아 포럼을 조직하고 실천하는가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다수의 아키비스트가 참가하는 ICA 서울 총회가 한국정부의 홍보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이런 동아시아 기록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록공동체는 지금 정치적인 관료와 디지털기술로 위장한 사이비 전문가들로부터 기록전문가윤리와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국가 공공기록관리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의 기록공동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고, 최근 한·중·일 역사 전쟁의 저격수로 중국과 일본의 기록 공개/은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중국 길림성 당안관의 일본침략기록 공개와 일본국립공문서관의 JAKAR 기록포털프로젝트)에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의 구상은 요원한 이상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물며 한·중·일 기록을 둘러싼 이 소리 없는 역사전쟁에 한국의 국가기록원의 소장 기록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담하다. 동아시아 역사전쟁의 해소는 저자가 강조하듯이 과거사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역사기록의 공개와 휴머니즘에 기반한 성찰적, 역사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권기록에 대한 세계 기록계의 보편적 인식은 기록 폐기와 은폐를 통한 기억의 통제와 망각을 거부한다. 부디 한·중·일의 국가아카이브의 인식 수준이 세계의 보편적인 인권 기록 인식 수준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고만고만한 디지털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세계에 내세우고 각인시킬 수 있는 기록문화 선도국의 긍지이다.